

미세먼지 심한날엔...

# 공해차량 40만대 운행 금지

### 서울시, 노후 경유차 등 차량제한 운행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는 서울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는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만 운행이 제한됐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8만대 늘어 40만대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매년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상먼지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

뤄진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가동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 총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상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민선 5·6기 서울시정, '포용·전환·협치' 성과는?

서울연구원, 시정 의의·성과 조명

서울연구원은 민선5·6기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조명하는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5·6기를 돌아보고, 민선 7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포용도시시는 2010년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도출된 사회의 제1차 정책담론이다.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평가한다.

전환도시시는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순환 도시, 보행친화 도시 같은 에너지 정

책 전환을 집중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도시로 진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협치도시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적 노력(정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정장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서양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3無 혁신학교 세운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는 3無(무교수, 무교재, 무학비) 혁신학교가 서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에폴42'를 벤치마킹했다. 에폴42는 2013년 파리에 민간 주도로 설립된 대안 교육 기관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과 게이미피케이션(탈플레이 게임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 등의 교육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시는 혁신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업수요 발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생 선발 등을 담당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 추가 조성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를 추가 조성한다.

경기도는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 개발, 남북도서관 교류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오는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관을 신규로 건립해 325개관까지 확충하고, 노후도서관 35개관의 리모델링과 생활 SOC 작은도서관 142개소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 개발, 지역자료 아카이빙, 장서관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등 지식정보를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능 강화, 정보 불평등 개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공간구성, 도서관 홍보 확대 등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네 번째 '도서관의 허브,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보건용 마스크 누설률 시험장비 및 챔버. /서울시

##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장비 2대도 추가 구매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연구원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안면부 흡입 저항 시험 장비와 분진포집 효율 시험 장비를 전부 갖추게 됐다. 이로써 연구원은 마스크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준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누설률 시험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다. 자체 시험환경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전국 검사기관 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5곳만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업체는 86곳이며, 총 491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중 357건이 최근 3년간 신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5년 대비 266% 증가한 것이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목동~청량리 잇는 '강북순환선' 건설 추진

서울시, 사업비 약 2조원 투입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 '강북순환선' 건설이 추진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강북순환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긴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강북순환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강북을 좌우로 관통하는 지하철이다. 총 길이는 24.8km이며,

15개 역이 들어선다.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담방 한 달 살이를 마치며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내놨다. 당시 박 시장은 면목선(청량리역~신내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역~방학역)을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강북순환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